“성추행 면담조사 학생 입장에서 해야”

김승환 교육감 “상담전문가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 “부안 여고 학급수 조정은 성추행 비리와 별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부안지역 사립고교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기관 간(교육청과 경찰 간)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경찰과 교육청의 면담에 거듭 응하는 것이 짜증날 수 있다. 더구나 면담 내용이 명단과 함께 고스란히 학교에 넘겨진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면담조사를 하기 전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면담조사를 감사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학생들이 더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문가들에게 면담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법인 이사회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도교육청이 대처할 유효한 법률적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며 “비리사학을 보호하고 사학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구실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발표한 부안지역 여고 학급수 조정은 이번 성추행 비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부안지역의 학교 시스템을 들여다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일반계 고교를 진학하려 할 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지역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개혁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일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 개편 문제와 관련,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확실하다. 대통령 공약사항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유·초·중·고 교육, 아무런 유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G20 모습 담긴 사진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드라마 청와대 사람들’ 제목으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檢, 제보조작 수사 ‘분수령’ 이준서 영장 발부 총력

LL “이준서 책임 이유미 못지 않아” 영장 기각시 ‘여당 눈치’ 빌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국민의당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일단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오늘은 주요인물 소환조사 없이 증거정리 등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몰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를 진행해가는데 있어서 검찰에게 ‘분수령’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 ‘정치적 수사’를 운운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여당(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며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검찰이 자칫하면 공정성을 잃고 과잉, 정치적 수사를 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역시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조용하게 하면 된다”면서도 “(국민의당에서 말하는) 정치·가이드라인 수사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된 자료가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과정을 (수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의 책임 못지 않게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도 심리를 맡았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선 4일 전인 올해 5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은 후보 아들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파일이 이씨가 동생에게 문 후보 아들인 척 연기를 시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뉴시스

국회 예결위, 야3당 불참속 추경안 상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등 11건을 일괄상정했다. 나머지 10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3당 소속 예결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일괄 상정 전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예결위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다”며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중심으로 하는 11조2,000억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안 됐지만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추경 외 급박한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추가 채용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 등 생활안전분야 지역 현장 인력과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야 중심으로 충원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치 현안과 별개로 예결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의사발언을 통해 추경 관련 질의 개시를 촉구했지만 백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에게 “야3당 간사와 협의해서 예결위가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언주 ‘막말’ … 국민 개돼지 발언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마치 1년 전,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했던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떠오를 정도”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도저히 공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반 교육적, 반 노동적, 반 여성적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지난달 29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나선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미친놈들이야 완전히”라고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에는 열악한 조건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빠져있는 것인가. 국민의당의 ‘국민’에는 여성과 노동자들은 빠져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막말에 대해 국민의당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단순히 개인의 발언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불리만을 계산한 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번 발언이 노동과 국민에 대한 국민의당의 자기 고백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